

국가교육위원회 제66차 회의록

1. 회의개요

- ① 일 시 : 2026년 3월 12일 (목) 15:00 ~ 17:45
- ② 장 소 : 정부서울청사 본관 4층 국가교육위원회 회의실(413호)
- ③ 출석위원 : (위원장) 차정인
(상임위원) 김경희, 이광호
(위원) 강은희, 김 건, 김영도, 김 용, 김주성, 박영환,
반상진, 손덕제, 양오봉, 연취현, 유민봉, 윤건영,
이보미, 이슬기, 이 현, 전은영
(총 19인)

2. 회의내용

① 성원보고

- 재적위원 21인 중 18인 출석(19인 출석 예정)으로 성원

② 개회 및 모두말씀

- (간사) 위원장님의 개회선언과 모두말씀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3월에 학교가 개학을 하고 한 학년씩 진급을 하고, 또 진학을 하고 새로운 한 해를 여는 교육의 첫 달이 시작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새 학기가 되니까 우리 국민들과 교육 주체들이 교육현장에서 우리 국가교육위원회가 한국 교육의 변화와 희망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그런 기대를 보내주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고, 저는 그것을 매일 느낍니다. 그래서 국교위가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해결하고 성과를 많이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 거는 기대도 큼니다. 우리 회의가 잘 진행되고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의 좋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최

선을 다해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오늘 안건은 모두 7건이 예정되어 있는데 안건을 조금 소개를 드리면 첫 번째 안건은 국민 동의 요건 완화를 위한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개정 추진 계획(안)입니다. 두 번째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와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 3개 전문위원회의 위원 추가 위촉(안)입니다. 다음으로는 2026년도 특별위원회 추가 구성 분야(안)입니다. 이 안은 김 건 위원님, 김주성 위원님, 손덕제 위원님, 연취현 위원님, 장신호 위원님께서 주신 안건으로서 과학인재 특별위원회, 문해력 신장 특별위원회 등 2개의 특별위원회 추가 요청 구성(안)입니다. 다음으로는 특별위원회 활동 상황 보고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9개 특별위원회의 활동 경과와 주요 운영사항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28년부터 2037년까지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로드맵(안)입니다. 지난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반영한 방안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국가교육위원회 제66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 사 봉 3 타)

③ 안건 등 공개 여부 결정

- (심의·의결안건) ‘국민동의 요건 완화를 위한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개정 추진 계획(안)’ 공개
- (심의·의결안건) ‘중장기 국가교육 발전계획 전문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안)’ 공개
- (심의·의결안건)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안)’ 공개
- (심의·의결안건)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안)’ 공개
- (심의·의결안건) ‘2026년 특별위원회 추가 구성 분야(안)’ 공개

- (심의·의결안건) ‘특별위원회 활동 상황 보고’ 공개
- (심의·의결안건)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로드맵(안)’ 비공개

4] 활동 보고

- (간사) 지난 회의 이후 국가교육위원회 주요 활동에 관하여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처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 (사무처장) 지난 65차 회의 이후 국가교육위원회 주요 활동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전문위원회입니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 제27차 회의가 2월 27일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늘 보고안건으로 보고드릴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로드맵(안)과 그 외의 의제 내용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 다음은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제16차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3월 11일 수요일 온·오프라인 회의로 개최가 되었고요. 이날 전문위원회에서는 국가교육과정 분권화를 위한 재설계 방안과 현장 관점에서 본 교육과정 개정의 성공 조건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 2월 26일 목요일에는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 제11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오늘 심의·의결안건으로 올라온 국민 동의 요건 완화를 위한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개정안 검토, 그리고 국가교육발전계획 추진에 있어서 의견수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 특별위원회 활동입니다. 고교교육 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가 2월 23일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교학점제 운영 내실화를 위한 교원 관련 정책에 대한 검토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고등교육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가 2월 26일 개최되었습니다. 이

- 날 회의에서는 고등교육 체계의 혁신과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와 제6차 회의가 각각 2월 25일, 3월 11일에 개최되었습니다. 제5차 회의에서는 내신평가 등 대학입학제도 관련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제6차 회의에서는 학생평가 현황 등에 대한 외부 발제와 그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 민주시민교육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가 2월 23일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이텔스바흐 합의 관련 해외 사례, 그리고 경남교육청의 학교 현장 요구 분석 및 제도적 지원 방향에 관련된 발제가 있었습니다.
 - 영유아교육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가 3월 10일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육 환경 개선과 관련한 과제 발제가 있었고 향후 특별위원회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 인문사회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와 제6차 회의가 각각 2월 13일, 2월 27일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제5차 회의에서는 AI와 인문학 교육, 그리고 6차 회의에서는 인문사회 학술연구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 인재강국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와 제9차 회의가 2월 25일, 3월 6일 개최되었습니다. 제8차 회의에서는 인재강국 비전·추진전략 등에 대한 논의와 전문가 발제가 있었고, 제9차 회의에서는 보고서 집필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 학교공동체 회복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가 2월 27일 개최되었습니다.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분야 정책 검토 과제와 관련해서 관계기관 담당자들과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이 있었습니다.
 - AI시대 교육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가 2월 20일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종 보고서 논의 구조와 그 범위 및 주제 등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 그리고 국민 참여·소통 및 의견수렴과 관련해서 통합지원단 제1차 회의와 제2차 회의가 각각 2월 25일, 그리고 3월 6일 개최되었습니다. 통합지원단에서 향후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집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 AI 전환 시대 국가교육 비전 포럼이 3월 6일 금요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 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공AX분과장께서 AI 전환 시대에 대한 이해 및 AI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교육의 역할에 대한 발제와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활동보고와 관련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특별한 발언이 없으시면 보고사항을 접수하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 주요 내용

- 가. (심의·의결안건) 국민 동의 요건 완화를 위한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개정 추진 계획(안)
 - (간사) 먼저 심의·의결안건인 국민 동의 요건 완화를 위한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개정 추진 계획(안)에 대해 교육소통기획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자A) 국민 동의 요건 완화를 위한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개정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먼저 국민의견 수렴·조정 제도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국가교육과정 기준 내용 개발 고시와 함께 위원회의 소관 법정사무 중 하나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 수렴·조정에 관한 고시에서 세부 운영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견 수렴·조정 사무는 교육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국회, 대통령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90일 이내에 10만 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받은 요청이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절차 진행 여부는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 사전검토를 거쳐서 본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며,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이 된 경우 대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청기관 등과 관계기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2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시행령 개정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교위 출범 이후에 국회·언론 등에서 의견수렴 조정 요청을 하기 위해 필요한 국민 동의 요건이 과도하여 실효성이 작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동의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제도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 개정의 주요 내용은 현행 90일 이내에 10만 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 동의자 수를 9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이고요. 국회 국민동의청원 요건 등 국내외 사례를 참고하였습니다.
 - 관련해서 지난 2월 26일에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에서 사전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전문위원회에서는 현행 기준을 일시에 완화하는 것보다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고 국회 기준 등을 볼 때 5만 명 정도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 다만, 요건을 완화해도 충족하는 사례가 많지 않을 수 있으므로

동의자 수가 일정 수준에 도달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에서 요청 내용을 검토해서 본위원회에 의견수렴을 제안하는 방식 등 실질적인 운영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주셨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주시면 향후 입법예고, 법제 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행령 개정령(안)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도 위원)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국민 동의 요건을 필요로 하는 이런 사례에 있어서 통상 한 몇 명 정도가 지금까지 의견을 제시해 왔나요?
- (보고자A) 지금까지 저희가 국민의견 플랫폼이라는 창구를 통해서 의견을 접수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연간 올라오는 건수는 교육과정을 제외하고는 한 10건 내외로 건수는 작고요. 거기에 대한 동의자 수도 작은 수준이어서 완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김영도 위원) 그러면 지금 10만에서 5만으로 완화시켰는데 5만 명 정도 기준으로 하면 앞으로 의견수렴을 하는 데 충분할까요?
- (보고자A) 국회도 예전에 10만 명이었다가 5만 명으로 완화하고 접수나 이런 것들이 많아졌다는 사례를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전문위원회에서도 의견을 주셨지만 5만 명으로 완화해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더 정책을 추진해야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요청을 해야 국민 동의가 올라오나요?
- (보고자A) 예. 일단 국민의견 플랫폼에 본인이 정책의 어떤 해결을 위해서 글을 올리면 거기에 90일 동안 지금 현행 기준으로

는 10만 명이 동의를 해야 저희한테 접수가 오고요. 그것이 왔을 때 절차 진행 여부는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 (전은영 위원) 10만이었을 때는 사실 엄두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시도조차 없어서 거의 가망이 없다,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조금 활성화가 되지 못했고, 저도 홈페이지 들여다보면 10건도 있고 9건도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실효성 있는 숫자를 제시하면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는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 (박영환 위원) 이것과 별도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국민의견 수렴 플랫폼을 가보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 동의에 대한 것이 있고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20만 명입니다. 그래서 혹시 전문위원회에서 검토를 할 때 국민 동의에 대한 것만 완화하는 것을 검토했는지 아니면 교육과정 개정 20만 명에 대한 과도함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보고자A) 교육과정은 별도의 기준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어서 저희는 일반 교육정책에 대한 것만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 (보고자B)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기준은 지금 20만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견 플랫폼의 의견 제시는 일반 정책에 대한 제안보다 제안 건수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인원이 20만에 도달해서 검토하는 사례는 아직까지 없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국교위법 시행령들이 만들어질 때 왜 10만, 20만 이렇게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을까를 그 당시 입법의 논의 상황들을 확인했을 때는 국가교육과정의 일관성, 안정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당시에 설정이 되었던 것으로 보였고, 그리고 그 이후의 논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반 정책에 대한 요건 완화보다는 안정성과 일관성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판단도 있어서 아직까지 저희는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유민봉 위원)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조문에 보면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등’이라는 것은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이외에 다른 곳에도 이런 국민의견이 게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 (보고자A) 법적으로는 여러 방법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에서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별도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홈페이지와 연동되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현재는 국민의견 플랫폼으로 창구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여기 의견수렴 개요를 보게 되면 요청할 때 세 가지 통로가 있잖아요. 행정기관의 대통령이나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국민이 하는 경우,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에서 우리가 하는 경우,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것이 국민이 하는 것이지요?
- (보고자A) 예, 그렇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런데 국민이 한다는 것이 말이 국민이지 사실상은 교원단체라든가 학부모단체에서 하는 것이겠지요. 그동안 교원단체나 학부모단체에서 왜 이것을 추진하지 않고 국민 개인으로 한 10명, 20명 정도밖에 안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 검토된 결과는 있습니까? 지금 5만 명이나 10만 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여기에서 이것을 수행하거나 이것을 시작할 곳은 교원단체나 학부모단체일 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분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보고자A) 그러니까 저희가 초기에 홍보라든가 적극적으로 이런 홍보 전략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요. 앞으로 저희가 국가교육발전계획이라든가 국민참여위원회 2기가 활성화되면 연계해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이 플랫폼 자체의 존재 자체를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홍보 문제로 여쭙는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왜 이 통로가 교원단체나 학부모단체한테 관심을 못 끌었는지 여기에 대한 분석이 좀 있었으면 싶네요.
- (사무처장) 설명드리자면 이 제도 자체는 특정 단체나 기관과의 소통을 위한 창구라기보다는 일반 국민들이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국가에 요청하는 그런 창구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 (박영환 위원) 교원단체 의견을 물어보시니까 교원단체 속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교원단체장이 말씀드리는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난 시기에 워낙 갈지자 행보를 많이 했던 국교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논의가 되겠는가라는 고민도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제일 크게 작용했던 것은 있습니다.
-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에서 교육과정 에 대한 관심은 교사들이 제일 많은데 국가교육과정 개정 에 대한 논의를 붙이는 수준 자체가 20만 명이다 보니 짧은 시간에 20만 명에 도달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적 의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사를 가지고 입법 청원을 하는 경우에도 10만 명이었다가 5만 명으로 낮아진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만 명은 안정성을 기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높다는 의견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만 명을 도달한다고 해서 그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논의를 해 달라는 것인데 논의에 부치는 과정의 기준이 너무 높다는 이런 의견입니다.
- (위원장) 질문 다 하신 것 같은데 박영환 위원님께서 의미 있는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를 국민들이 제기한다면 20만 명은 너무 높은 장벽이고요. 그래서 이 20만 명이라는 숫자가 적절한가, 과도하지 않은가에 대한 논의를 개시하는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 정

도로 하고 이 주제는 넘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나 수정사항에 대한 요구가 없다면 원안대로 이 안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의 사 봉 3 타)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 (심의·의결안건)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안)

다. (심의·의결안건)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안)

라. (심의·의결안건)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안)

○ (보고자A) 다음으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안),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안),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개 전문위원회 추가 위촉(안)은 각각 28쪽, 34쪽, 41쪽에 추가 위원 위촉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 먼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 추가 위촉(안)입니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의 경우에는 인공지능 전환, 과학기술 인재 확보 경쟁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 인재양성 분야 전문가 1인을 추가 위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촉 대상은 28쪽 맨 하단에 있는 이재욱 위원이십니다. 전체 20명의 위원 명단은 29쪽에 있습니다.
- 다음으로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안)입니다. 34쪽입니다. 교육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게 되어 있어 위촉 대상은 박형준 위원이십니다. 전체 44명의 위원은 35쪽과 36쪽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 다음으로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안)입니다. 40쪽입니다. 전문위의 보다 내실 있는 자문·사전검토 역할

수행을 위해서 기존 10인의 위원에 더하여 7명의 위원을 추가 위촉하고자 합니다. 41쪽에 7인의 명단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2쪽에 기존 10명의 위원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약력에 대해서는 별지로 자료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해당 소관 과에서 좀 더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 (김경희 상임위원) 상임위원 김경희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서 제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와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는 제가 주로 제안을 드렸고, 위원장님과 이광호 상임위원이 대개 동의를 하신 부분이라서 어떤 취지로 추천을 드렸는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판단을 빨리 도울 것 같습니다.
- 29쪽에 나와 있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 위원 명단이 현재 21명 중에 한 명이 사퇴해서 20명이 계신데 이 중에 이공계 분야, 특히 AI 분야 전문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뒤에 인적사항 나온 것처럼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이시고, 현재 서울대학교에 AI연구원이 있어요. AI연구원장을 맡고 계시는 이재욱 씨를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 두 번째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는 35쪽과 36쪽에 44명이 계신데 여기도 한 분이 도중에 사퇴를 하셔서 한 분을 보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 뒤에 보시면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의 박형준 교수를 제가 추천했습니다. 이분의 이력을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경제교육을 전문으로 하신 분입니다. 주로 경제단체나 산업계에서는 경제교육을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이런 분이 들어오시면 경제교육이라든지 사회교과군 쪽과 협의할 때 전문적인 얘기를 해 주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전은영 위원) 분야를 좀 보려면 사퇴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을까요?

- (보고자A)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는 기존에 황규호 위원님이 사퇴하셨습니다. 황규호 위원님은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님으로 교육과정 전공자였는데요. 기존에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 위원님들이 사퇴한 이후 빈자리 1인에 대해서는 이공계 출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공계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AI시대 전환에 따라서 교육정책을 논할 수 있는 전문가가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하신 바 있습니다.
- (보고자B)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는 예전에 공동위원장이셨던 성태제 위원장님이 사임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공석이었고요. 논의하시면서 경제교육이나 수업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성이 높으신 분으로 논의하셔서 추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손덕제 위원) 혹시 그러면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가 인원이 굉장히 많은데요. 앞에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도 위원장님이 두 분이시고,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도 두 분이셨다가 이제 한 분이 빠지면 여기 위원장님이 한 분 더 추대가 되시는 것인가요?
- (보고자B) 논의하시면서 공동위원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국교위법 시행령에 따르면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4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령도 아마 고려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손덕제 위원) 1인 이하면 1명까지만 된다는 것 아닌가요? 아까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는 2명인데 그러면,
- (보고자A) 저희가 1기 전문위원회 구성할 때 공동위원장 관련해서 법령 유권해석을 하였는데요. 우선 법상으로는 1인 이하로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여야 합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야 각각 1인씩 해서 공동위원장을 추대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그렇게 2인 체제로 해도 문제는 없다는 해석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번에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는 이제 공동위원장이 사퇴하시면서

그 안에서 따로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손덕제 위원) 저는 추후에 위원장님이 한 명 더 추대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반상진 위원) 저도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내용에 대한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국가교육과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만큼 여기 보면 초등과 중등에 학교급별 분과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교과 영역에 대해서는 어느 영역은 좀 부각이 되고 어떤 영역은 안 되어 있고, 일반적인 교육과정 전공자가 있고 이런 식으로 분포상, 물론 다양한 교과목을 여기에 다 배치하라고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닌데 구성하실 때 초·중등, 그다음에 교과 영역, 또 일반 교육과정 전문가 이런 영역을 약간 비율에 맞춰서, 물론 이분들이 임기는 되어 있지만 차후에 그런 요인까지도 구성해서 전문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김경희 상임위원) 그다음에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가 일곱 분인데 그것도 한번 같이 봐주시지요. 거기다 아까 우리 반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초등만 있어서 중등을 두 분 더 추가했고, 또 갈등전문가 등을 포함시켜서 일곱 분을 추가로 하는 겁니다. 보니까 41쪽에 있네요.
- (박영환 위원)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 반상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다 보니까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의 문서에는 구성원칙이라는 것이 별도로 되어 있어서 유목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40쪽에 구성원칙이 이렇게 나뉘져 있는데 그 앞에 있는 다른 전문위원회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여쭙봤습니다.
- (사무처장) 이것은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는 새로 신규 위촉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원칙을 설명드린 것이고요. 앞서 두 전문위원회는 사퇴하신 위원님에 대한 결원 보충 개념이라서 그렇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광호 상임위원)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는 1기 후반부에 전문위 위원을 구성했는데 그때 아마 21명을 다 안 채운 이유가 2기가 새롭게 구성되면 여기서 전문위 위원을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들었고요. 그래서 원래 열 분인가로 출범을 했었고, 전문위 내부에서 인원을 계속 빨리 보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보강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었을 때 전문위 의견이 여기 기존 전문위 위원 중에서 초등은 있는데 중등 교원이 없다, 중등 교원을 보강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진짜 이런 공론화의 전문화,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나 공론화 전문가들을 찾아서 충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잘 보시면 충원된 분들이 대부분 교원 두 분 빼고 우리나라 공론화 분야에서 가장 대표적인 분들을 저희가 어렵게 찾은 것이고요. 저희가 일부러 21명을 다 안 채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라도 더 필요하면 한두 분 더 모시더라도, 그래서 어쨌든 저희로서는 꼭 필요한, 왜냐하면 국민참여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국민참여위원회에서 해야 할 사회적 합의 같은 것들을 이 전문위원회에서 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한 분들만 일단 우선 모신다, 전문위 위원을 위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제 질문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아까 손덕제 위원이 말씀하신 국가교육과정 전문위를 공동위원장 체제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공동위원장 체제로 하는 것이 특별히 규범을 위반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래서 아마 위원회 내부에서 공동위원장 체제를 요청하실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공동위원장 체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른 추천된 분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이 많음)

위원들에 대해서는 상임위원들과 다 상의가 된 바이고, 훌륭한 분들을 채우게 되어서 아주 반가운 마음입니다. 위원들을 모시고 잘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괜찮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의 사 봉 3 타)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마. (심의·의결안건) 2026년 특별위원회 추가 구성 분야(안)

- (간사) 마지막 심의·의결안건인 2026년 특별위원회 추가 구성 분야(안)에 대해서 김 건, 연취현, 김주성, 손덕제, 장신호, 5인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셨는데요. 대표 제출자이신 김 건 위원님이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회가 생기고 나서 개정된 규정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안전을 처음으로 제안하고 설명하는 첫 안전입니다. 관심 있게 들어봐 주시고요. 시작해 주시지요.
- (김건 위원) 안녕하십니까. 2026년 특별위원회 추가 구성 분야(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먼저 추진 목적입니다. 저희가 지금 9개 특별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다루지 않고 있는 분야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저희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초안을 작성할 예정인데 여기에 포함될 의제 발굴을 위해서 심도 있는 교육 의제를 논의할 추가 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져서 이번에 안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추진근거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8조와 동법 시행령 19조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또는 위원 3명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특별위원

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지난번 회의 때 의결했던 운영규칙 개정안에도 근거를 마련하여 저희가 이번에 1호 안건으로 새롭게 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주성 위원님, 손덕제 위원님, 연취현 위원님, 장신호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번에 보고 기회를 주셔서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특별위원회 개요입니다. 현재 고교교육, 대학입학제도 등 9개의 특위가 구성이 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특위는 이번 달부터 한 4월, 5월, 그리고 6월까지를 기점으로 해서 차례차례 운영이 마무리될 예정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추가 구성 분야를 저희가 희망하는 분야는 첫 번째 과학인재 특별위원회, 그리고 두 번째는 문해력 신장 특별위원회입니다.
- 우선 추진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학인재 특별위원회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고등학교 과정에만 과학영재학교가 8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중학교 단계의 영재교육은 방과 후나 주말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금 관심 저하, 그리고 학령인구 감소 등의 이유로 2013년 이후에 대상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영재교육 이력이 반영되지 않고 그 기관과 프로그램도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반면, 중국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학 수준의 심화교육을 제공하고, 소년반 제도를 운영하는 등 과학인재 육성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도 과학인재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종합적인 과학영재 교육 강화 방안이 요구됩니다.
- 문해력 신장 특별위원회입니다. 지난해 10월 한국교총이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해력 붕괴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기본적인 어휘 이해 부족 사태가 다수 보고되었으며, 상당수 학생의 문해력 저하로 정상적인 수업 진행이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꼽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해력 신장 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한 국

가 차원의 문해력 회복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 운영방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인재 특위 같은 경우 국가의 성장을 이끄는 과학인재 교육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서 잠재력 있는 과학인재 발굴,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영재교육기관 및 영재학급 확대, 교원의 전문성·역량 강화, 지속가능한 교육 기반 마련 등 종합적인 과학영재 교육 강화 방안을 제안했으면 좋겠습니다.
- 문해력 신장 특위는 이제 문해력이 곧 AI시대의 생존기술인 만큼 문해력 회복을 국가적 과제로 삼고 독서 활동 강화, 글쓰기 교육, 한자 교육 등의 문해력 회복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운영방식은 기존 특위와 동일하며,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신규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촉은 이번 달 혹은 4월까지 최대한 빠르게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드리고, 그러나 과학인재 특별위원회의 경우에는 지금 반상진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계시는 인재강국 특별위원회 운영이 올해 5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의 연계와 연속성을 고려하여 5월에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제안된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 (반상진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특위를 지금 제안하셨는데 기존에 이제 9개에서 11개가 되는 것이지요. 보니까 기존 특위도 어떤 교육 분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도 하고, 제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도 하고, 학문 분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과학인재 특위 분야는 지금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인재강국에서 가장 큰 portion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학인재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저희들이 제안하기 위해 4월 말까지 집중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과학인재 특위로 좀 더 구체화시키

는 것은 저는 이견이 없습니다.

- 그것은 이견이 없는데 두 번째 문해력 신장 특위는 너무 범위를 작게 잡은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리터러시'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 그냥 문해력 자체가 디지털 리터러시 포함해서 다양함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OECD에서 대한민국 문해력은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문해력 신장 얘기를 하고자 한다면 이 방향을 조금 더 확대시키는 것이 어떨까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금일', '왕복' 이런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문해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언어의 변화에 대한 이해의 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터' 얘기도 많이 나오지요? 알아들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점메추', '저메추' 이런 얘기 우리가 못 알아듣잖아요. '킹받다' 이런 표현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어가 시대에 따라 흐름이 달라지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문해력으로 치환해서 너무 우리 대한민국 교육을 격하시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 그래서 저는 '문해력 신장'이라기보다는 '기본교육 신장'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리터러시 문제뿐만 아니라 사고체제라든지 공감능력, 이런 전반적인 것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본교육 신장 특별위원회'로 해서 문해력 플러스 시대감각에 대한 어떤 이해, 서로 공감하는 능력, 배려하는 능력, 이런 것까지 포괄해서 이왕 특위를 마련하신다면 그런 쪽으로 좀 더 확대하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손덕제 위원) 우리 반상진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고교학점제의 문제를 되돌아봤을 때 학교 현장에서 가장 우려하고 또 반발이 많았던 것이 과연 초등학교 때부터 무너졌던 기초학력과 문해력의 저하를 왜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책임져야 하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안을 3개 단체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대안은 초등학교 때부터

3R, 읽기·쓰기·셈하기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기본적인 것들부터 배워나가고, 또 부족한 것들을 진단해서 그 체계를 이루자는 것이 저희들의 대안이었습니다. 사실 그 대안이 나오고 난 뒤에 그 대안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방안은 없었고요.

- 그런데 그것을 기초학력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넓게 하면 좋지만 우리가 특위라는 것은 6개월 안에 어떠한 목적을 딱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답 정도는 낼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반상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인재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과학인재 부분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셨지만 그것처럼 어떤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지금 학교에서 실제로 아이들의 문해력이 떨어지는 문제로 인해 선생님과 아이들의 언어 사용과 소통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교 현장에 대해 논문 쓴 것들을 보면 ‘문해력 향상’이라고 검색했을 때 이것에 대해 많이 검색이 됩니다. 선생님들도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많이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 그래서 지금 문해력이라고 하면 좀 작게 느껴지지만 아이들에게는 지금 굉장히 큰 문제이기도 하고, 저는 학교 현장에서의 그런 문제를 되돌아봤을 때 코로나 시기 이후에 아이들이 인터넷과 쇼츠 문화에 젖어들다 보니까 조금 전에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한 아이에게 ‘너 참 고지식하다.’라고 하니 ‘내가 지식이 높다고?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이들의 이해가 실제로 대화를 하다 보면 수업 시간에 그런 것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디부터 건드려야 될까라는 문해력이라는 초점에서부터 아이들과 소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 그리고 우리가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할 때 비판적 시각과 아이들의 어떤 이해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문해력이라는 것이 그냥 읽는 수준이 아니라 그 문자를 읽고 그것에 대한 해석을 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이들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제안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슬기 위원님.
- (이슬기 위원) 질문할 것이 좀 여러 가지 있는데 짧게 해 보겠습니다.
 - 첫 번째는 AI 문해력 관련해서 AI시대 특별위원회가 5월까지 활동하는데 여기 위원회에서 AI 리터러시 정의 및 필수교육 관련해서도 보고서에서 다루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위원회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 다른 하나는 제가 과학인재 관련해서 관심이 많아서 운영방향 측면에서 짚을 지점이 있습니다. 이 운영방향이 확정인 것인지 아니면 안인지가 궁금한데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제가 찾아보니까 이것이 2023년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운영방향에서 지금 다섯 가지 방향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 중에 4개가 계획에 있는 세부과제와 wording이 완전히 똑같은데 그것을 의도하신 것인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그러면 그 법정계획이 이미 수립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왜 이 위원회를 또 해서 해야 되나, 그러니까 법정계획과의 관계가 하나의 질문이고요.
 - 또 다른 것은 한 가지 다른 것이 3번 영재교육기관 및 영재학급의 확대, 이것이 원래 법정계획은 교육기관 운영의 특성화더라고요. 그러니까 특성화는 확대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내실화하겠다는 것인데 확대는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것 같아서, 이것이 지금 법정계획과 방향이 되게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것이 방향에 들어가 있어서, 제 요지는 이 법정계획과의 관계, 그리고 세부과제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 (김건 위원)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지금 제안자는 뒤에 답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민봉 위원님.
- (유민봉 위원) 저는 우리 교육위원회가 다양한 분야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좀 더 전문가들로부터 심도 있는 연구를 하고 의견을 모으고 결과물을 산출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런데 이 특별위원회에서의 산출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 교육위원회가 있고 교육부가 있는데 우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가장 핵심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그러니까 이런 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 보고서가 나오면 그런 것이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 어떻게 반영될 것이냐, 또 하나는 교육과정이지요. 그러니까 이 교육과정을 바꾸고, 또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들 결과물이 이렇게 활용될 때 의미가 있는 것인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나오는 결과물을 그냥 우리만 이렇게 알고 결과물을 받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교육부에 토스해서 이것을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하는 이럴 수 있는 상황, 이런 것이 좀 고민이 됩니다.
- (위원장) 그에 대해서 제가 먼저 답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는 모든 특별위원회가 정책화를 지향하고 있고요. 논의를 하고 보고서를 내고 마치는 것은 유용한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 정책화할 수 있거나 시급하고 실행 가능성이 있는 것은 다른 부처, 즉, 교육부 등과 협의해서 정책화에 들어가고요. 심지어 어떤 경우는 입법화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와 협의를 하고요. 그중에 다수는 중요한 의제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면 10년 단위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할 수 있는 논의 구조를 만들어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와 특위가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특히 서로 자료를 보내고 피드백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설계되어 있고 그 과정을 양 위원회가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할 것입

니다. 박영환 위원님.

- (박영환 위원) 과학인재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감을 하는데 저는 추진 필요성에서 아까 이슬기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과 좀 연계도 되는데요. 이것이 뭔가 결론을 정해 놓고 문서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이 좀 있습니다. 운영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숙의와 개선방향이라든지 이렇게 좀 잡히면 모르겠는데 지금 영재 교육기관 및 영재학급 확대 거의 이렇게 확정적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궁금하고요.
- 그리고 지금 추진 필요성, 47쪽에 보면 지금 초·중학교 단계의 영재교육은 방과 후나 주말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초·중학교에 있는 영재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별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영재교육'이라고 하는 이름을 딴 것이지 실제로는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와서 주말에 몇 시간 정도 이렇게 아이들과 프로그램 돌리는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영재교육이라고 해서 문서에 들어와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의아하고요.
- 그리고 만족도는 높으나 학령인구 감소와 관심 저하로 2013년 이후 대상자가 줄고 있다고 하는데 보면서 대상자가 줄고 있는 명확한 원인이 좀 불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고민에 대해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 있고요.
- 그리고 지금 중국은 0.5% 학생을 선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찾아보니까 영재학교가 8개, 그리고 과학고가 20개 이렇게 되어서 총 6,895명으로 전체 고등학교 학생의 0.5%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비교해서도 숫자적으로도 부족한 숫자로 비교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입시경쟁 시스템에 완전히 종속이 되어서 실제로 이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나중에 추적해 보면 한 20% 정도가 의학계로 지금 다 진출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의 문제

가 있는데 지금 뭔가 영재교육기관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연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우려스러운 고민이 들고요.

- 이제 여기에 연계되어서 보면 최근에 전남광주특별시라든지 대구·경북이라든지 충남·대전특별시 법안에 보면 자사고나 특목고 신설에 대해서 특별시장에게 권한을 주는 이런 방식의 내용들이 법안에 들어가 있어서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이것이 지역소멸 정책과도 연계가 되어서 진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재강국을 지향하는 방향에서 진행되는 정책이라기보다는 뭔가 특권 학교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는데 이런 정책적 방향을 맞춰놓고 지금 위원회가 설계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답변도 듣고 싶습니다.
- (반상진 위원) 참고로 저도 박영환 위원님 말씀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제 과학인재 특위가 구성된다면 필요성은 제가 생각할 때 다시 진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재강국 특위에서 과학인재 관련되어서 영재학교와 과고와 UNIST, KAIST 교수들과 다 같이 한번 토론한 적이 있었는데 각자 영역에서 결이 다릅니다. 여기는 영재학교만 얘기하셨는데 거기서 영재학교는 또 굉장히 도전을 받습니다. 과고라든지 UNIST나 KAIST에서 또 문제제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포괄하신다면 과학인재에 대한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하거나 문제의식을 좀 더 클리어하게 제시하는 것이 낫지, 영재학교로 이렇게 딱 세팅해 버리면 나중에 과고라든지 UNIST, KAIST에서도 굉장히 도전받는 그런 문구가 될 겁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김경희 상임위원) 좌우지간 우리가 지난번에 운영규정 개정해서 위원님들께 발의권을 드렸는데 다섯 분이 처음으로 발의해주셔서 다섯 분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본위원회 위원님들이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의제를 발굴해서 제안해 주면 굉장히 활성화가 되겠다 싶어서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 저는 지난 회의 때 이 두 건이 왔기 때문에 찾아봤는데 과학인재는 자꾸 초·중등만 얘기하시는데 중국을 저는 주목을 했습니다. 중국의 초·중등은 일찍 10세부터 쉽게 얘기해서 '천재'라는 용어를 쓰던데 구분해서 별도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가르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대학입니다. 아시잖아요. 15세 천재반이 있고, 그다음에 '강기(強基)'라고 해서 이공계는 별도로 뽑아요. 소위 말하면 가오카오 성적 이외에도 뽑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대학에 가면 베이징은 튜닝반이 있어서 석학들이 또 천재를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그분들이 나아가서 창업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과학기술 굴기를 하고 있구나, 미국은 쉽게 얘기해서 수월성 교육을 하더라도 민간에 맡기고 시장에 맡기지만 중국은 정부가 나서서 소위 말해 인재를 통해서 과학굴기를 하고 세계 패권까지 넘보는 나라가 되니 이것을 우리가 이 기회에 특위에서 한번 따져보자는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을 했고, 이것이 필요하다고 느꼈고요.
- 두 번째 문해력 부분은 아까 우리 반상진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기본교육이라고 하게 되면 이것이 기초학력처럼 생각되어서 굉장히 넓어질 것 같은데 문해력 하면 상당히 좁아집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이 독서 교육, 글쓰기 교육부터 해서 한자 병용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면 AI 리터러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특위 같은 데에서 해 주면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담는 데 크고 중요한 의제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 특위 내용은 나중에 특위에서 결정할 사안이고 2개 안건은 일단 설치하면 어떨까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 (반상진 위원) 제가 의견을 드리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문해력이 굉장히 높은데 국교위에서 '문해력 신장'이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 대한민국 문해력이 굉장히 떨어지나, 다른 나라에서 볼 때는 그런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해력이라는 아주,

- (김경희 상임위원) 표현이 문해력은 기본교육보다는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 (반상진 위원) '문해력'이라는 표현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대한민국의 쓰기에는 좀 어설픈 단어라는 겁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가 문해력이 떨어지는 것은 다인종이기 때문에 문해력이 떨어지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단일민족이라고 통상 얘기하기 때문에 문해력이 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기관에서 '문해력 신장'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단어를 씀으로 인해서 오히려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다른 단어로 이렇게 바꿔달라는 얘기입니다.
- 그리고 너무 영재를 말씀하셨는데 그날도 토론회에 계셨겠지만 0.1%가 99.9%를 먹여 살린다는 이 철학 자체가 지금은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날도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영재, 영재 하지 마시고 과학인재의 pool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이냐, 과학인재 특위이니깐 그런 인재 pool의 확대를 위해서 범위를 넓혀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문해력 신장' 이 단어를 더 확대시켰으면 좋겠고, 과학인재는 영재학교 플러스알파로 과학인재의 pool을 확대시키는 쪽으로, 물론 인재강국에서 제안하겠지만 이 특위에서 그런 쪽으로 지향했으면 좋겠다, 너무 0.1%라고 하는 것은 AI시대에 맞지 않는 콘셉트와 철학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이라서 굉장히 그 부분은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광호 상임위원) 아마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규정을 바꾼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첫 번째 안인 것으로 제가 아는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제안을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 과학인재는 지금 나왔듯이 이 특위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느냐는 것이 불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방향에 대해서 약간 이견이 많은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인재강국 특위가 활동 중이어서 이것은 일단 유보를 하고 만약에 과학인재 특

위를 다시 한다면 이에 대한 운영방향이나 취지를 다시 정리해서 인재강국 특위 끝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 '문해력 신장'에서 '신장'이라는 말이 약간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내리는 그런 느낌도 들지만 어쨌든 문해력에 대한 고민은 지금 잘하더라도 앞으로 더 잘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특히 AI시대에 아이들이 깊이 있는 사유를 하려면 정말로 독서라든지 개념어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신장'이라는 단어가 어색하면 '문해력 향상'이라든지 뭔가 그런 방식으로 이것은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것은 다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발언 다 하셨지요? 김 건 위원님이 발언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특위에 대해서는 우리 특위의 목적이나 국교위에서 차지하는 위치나 이런 것을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 제안 2개가 아주 좋은데 문해력 신장 부분은 제가 볼 때 좋은 제안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반상진 위원님께서 한국의 문해력이 나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세계 수준에 비하면 한국 문해력이 높지요. 높는데 최근 약 12년의 통계를 보면 한국의 문해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적인 단어, 주로 한자어로 된 그런 단어들을 이해하지 못해서, 초보적인 단어만 알아도 아주 간단한데 한자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하나하나 외우다시피 합니다. 가령 지리 시간에 천수답을 얘기하면 이것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하늘 천(天)'자, '물 수(水)'자를 써주면 하늘에 떨어지는 비를 받아서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논이다, 이렇게 한자만 알면 금방 알고 평생 잊어먹지 않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천수답은 이러이러하다는 개념어를 쪽 문장으로 외워야 됩니다. 그런 예가 수없이 많고요. 모든 학문 용어는 한자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어를 포함한 그런 문해력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 그래서 그 개념어를 설명하느라고 수업이 50분이면 20분 정도를

써야 될 정도로, 그렇게 해도 그냥 외우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 말이 어디서 유래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금방 까먹어 버리고요. 학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한국어를 원활히 사용할 수 없는 것이지요. 어휘가 부족한데 어떻게 문해력이 늘겠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는데 문해력에 대한 특위 주제가 결코 작은 주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시급한 주제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국가교육위원회라면 고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 '문해력 신장'이나 '향상'을 말씀하셨는데 '신장'이라는 단어를 아이들이 잘 모를 겁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혜를 모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특위는 구성되면 좋겠는데 용어가 학계나 교육계에서 지금 '문해력 문제'라고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해력'이라는 단어를 쓰면 어떨까 싶습니다. '향상' 또는 '신장'으로 해서 출범을 시키면 어떨까 싶고, 그러면 많은 지혜들이 나올 것이고 그 지혜를 한번 모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더 좋은 용어가 있을지는 토론에 부치면 될 것 같고요.

- 과학인재 이 부분은 지금 토론하다 보니까 특위에서 할 토론 내용이 막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할 것은 아니고 제가 과학고, 영재고와 같이 과학인재 성장의 첫 출발이 되는 그 문제를 다루는 인재강국 특위 회의에 내내 참석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인재를 특별히 양성하는 학교를 많이 만들면 좋겠지만 우리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과학고나 영재고가 잘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 아닙니까, 지금 벌써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학고, 영재고가 만들어지는 바람에 과학고와 영재고의 대학 입학이나 학생부 기재라든지 그런 룰이 다릅니다. 그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 때문에 현재 영재고가 더 나은 등급의 학교처럼 취급이 되고 과학고의 우수한 인재들이 또 약간 위축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 문제들을 여기서 다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바로 잡고 학교의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이 바로 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대학과 잘 연계되도록 하는 그런 논의, 디테일한 것을 잘 챙겨나가는 것이 먼저다, 학교를 그냥 확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인재강국 특위에서 이 문제를 생각보다 굉장히 심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논의를 하는 수준이 높아서 아주 만족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적절한 방안이 나오기를 기다려 보고 그 뒤에 생각을 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되고요.

- 우선 제 생각에는 오늘은 문해력 신장 특위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싶고, 그 특위의 이름에 대해서는 저는 제안자의 원안도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데 더 좋은 안이 제안되면 이름을 수정해서 통과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전은영 위원) 추가로 말씀 조금 드리고 싶은데 해도 되나요?
- (위원장) 예.
- (전은영 위원) 문해력 문제는 공감이 일단 많이 되고 있고 이런 제안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런데 말씀을 꼭 듣다가 모든 학습자들이 한자 기반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맞지요. 그것을 이해하고 있을 때 상당히 유리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조금 발상을 달리해 봤어요. 이 자리에서 도드라지는 발언일 수 있어서 먼저 양해를 구하고요. 이 자리에 20대가 20명 있는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 주셨던 '킹받다'라는 단어를 50대 이상이 너무 이해를 못한다, 그래서 어떤 특위를 만들어서 이것을 이해하는 방법을 강구해야겠다는 특별위원회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말씀들을 꼭 들으면서 저는 문해력 신장을 해야 되는 것에 크게 동의하면서도, 그래서 저는 추가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향이 기존의 언어들을 학습시키고 이해시키는 방법을 도출하는 위원회, 그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문해력 신

장'보다는 아까 반상진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더 확대해서 학생들이 신장된 문해력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까지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해력이 신장되어서 SKY 잘 보내자, 이 방향으로 몰려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해력 신장시키고자 하는 근본적인 이유,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를 하고 깊이 있는 사고를 하고, 그런 사고를 하는 국민들이 모여 있는 국가를 만들고 싶은 것이잖아요. 이름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깊이 있는 사유 이런 식으로 방향을 조금 더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지 않고 기존에 한자 기반의 언어를 학습시키는 방향, 구체적인 방안 도출, 이렇게 되어 버리면 지금 20대와 저는 못 만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조금 넓혀주시고 공감까지 같이 고려하여 이 위원회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첨언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 (연취현 위원) 저도 한 말씀...
- (위원장) 예.
- (연취현 위원) 전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문해력의 뜻이 읽고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이고, 특히 문해력 특별위원회에 집중해야 할 분야는 초·중·고, 중등까지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요. 텍스트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어려운 영자신문을 봤을 때처럼 텍스트를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점점 난독증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유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생각은 하고 인지도 되고 언어도 잘 되지만 교과서에 나오는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학교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선생님들이 교육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문제가 막 도드라지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학교에서도 그렇고 실제 시중에서도 문해력 제목을 단 학습지가 나오고, 학원에서도 문해력을 지도하는 학원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실제 교육현장에서 문해력,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

는 능력으로 인해서 교육 분야에 약간 loss가 있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징후가 있기 때문에 저는 문해력 분야에 집중해서 초창기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초창기에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사유, 능력 이런 것은 매우 좋은데 민주시민교육 특별위원회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해력을 통해서 발달된 사유와 표현의 능력들이 다른 형태로 드러나는 것은 그다음 문제이고 지금 문해력의 저하가 시작되는 시기에 이 부분에 조금 집중해서 우리가 고민을 모아보면 어떨까 하는 차원의 반대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 (이보미 위원) 위원장님, 발언 신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예.
- (이보미 위원) 저도 2개 특별위원회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꼭 필요한 위원회라는 생각이 들고, 문해력 신장 특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도 대구교육청 소속으로 그렇게까지 시골이나 지방에 있는 학교에 근무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1년간 같이 일했던 동료들 중에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과 지역에 있는 학교에 근무하시는 초등 선생님들도 많으셔서 그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첨언하고자 합니다.
-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부모가 내국인이고 한국인인 그런 가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업구조도 변하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외국인인, 그러니까 국적이 아예 다국적인 학생들이 너무 많고, 또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교생이 17명이면 11명이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그런 학생들도 많은 지역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이나 그런 시급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고 듣고 있고, 여기에 다양한 지역에 있는 분들의 현장 목소리가 반영되면 좋겠지만 제가 그런 환경에 있는 교사들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으로서 이 특별위원회가 빠르게 구성되어서 실태조사도 빨리 이루어지고 우리나라에 굉장히 빠르게 급속도로 늘고 있는 다문화 학생들, 또 기초적으로 문해력이 정말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하는, 설당물을 잇몸에 발라서 허뿌리 교육을 해야 되는 그런 학생들까지 정말 심각한 그런 환경인데 그런 교육이 최대한 빠르게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민봉 위원님.
- (유민봉 위원) 지금 '문해력 신장'이라는 지향성 단어 때문에 조금 의견이 나뉘는 것 같은데요. 기존 특별위원회도 학교공동체 회복이라는 방향성 이외에는 고교교육, 대학입학제도, AI시대 교육, 인재강국, 이런 식으로 사실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고 그 단어만으로 위원회 이름을 붙인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문해력 특별위원회'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 고요.
- 과학인재의 경우에 그 안에 지향성이 담겨 있는 부분이 이미 우리 위원님들 간에 이것은 찬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특별위원회는 위원 구성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고 숙의가 이루어져서 어떤 공통분모, 공감대를 형성하면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결과물 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님과 위원장님이 결정하시겠지만 과학인재든 문해력이든 위원 구성의 밸런스를 어떤 식으로 할지 앞으로 추천을 받아서 그것에 우리 가 집중하시면 될 것 같고, 48쪽에 그 시기도 '인재강국 특별위원회 운영이 2026년 5월 3일까지이므로 과학인재 특별위원회의 경우 내용의 연계성과 연속성을 고려하여 5월에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러면 구성 은 심의·의결하지 않더라도 한 5월 정도에 이 결과물을 보고 과학인재 특별위원회의 구성 여부에 대해서 그때 심의·의결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의견을 제안드립니다.
- (위원장) 특별한 이견이 있으십니까?
- (강은희 위원) 사실 위원회의 명칭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문제의

본질을 보는 것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 건 위원님께서 제안한 것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과학인재에 대한 중요성과 몰입 정도가 지금 많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현장에서는 이런 말도 들어보셨겠지만 ‘대입의 사탐런’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하고 너무 과학영재에 집중하는 특목고나 이런 차원에서 볼 일이 아니고, 우리 시도교육청이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과거에는 이런 영재반을 운영하고 그러면 호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입과 연계성이 떨어지면서 이 부분에 대한 흥미가 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것이 괜찮은가, 그래도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에서 볼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사고하는 능력, 그리고 그 내용들이 보면 별것 아닌 것이 아니고 사실은 상당히 교사들이 노력해서 아이들의 생각과 사고, 과학적 사고를 트여주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영재적인 훈련이나, 저는 그렇게까지 안 보더라도 기초교육에 있어서 아이들의 과학적 사고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과학인재를 향하는 우리 교육정책의 필요성이 연계되어서 어떻게 하면 대학교육과 연계가 될 수 있는가, 이런 논의가 저는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 그다음에 문해력 부분도 이 두 가지 부분은 현장이 책임지고 있는 입장이어서 사실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보니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제는 학교 단위에서 교과 시간 안에서만 이 문해력을 해결하는 것이 한계에 도달하지 않았나, 아이들이 쓰는 용어가 정말 너무 많이 다릅니다.
- 그런데 우리의 언어, 특히 우리나라 언어는 한자어에 기반이 되어 있는데 한자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생각하는 수준의 그런 심각성 정도보다 저는 더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어를 하면 영어 한 단어, 단어의 뜻을 번역해서 해 주듯이, 우리말을 쓰고 있는데 지금 단어 번역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아이들의 생활 속에 매우 전반적

으로 내려앉아 있어서 이것이 학습만으로 가능한가, 저는 조금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정말 더 늦기 전에 언어에 대한 중요성, 우리가 쓰는 우리 언어에 대한 중요성을 아이들뿐만 아니라 사회 제반 인식도 좀 바꿔주면서, 그런데 교과 안에서 이것이 다 해결이 되느냐, 처음에 저도 그것을 기대했는데 점점 이것이 불가능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사회 전반의 용어에서부터 아이들이 못 따라가고 있고 이것이 심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위원회를 발족하게 되면 우리의 품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하시는데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을 이렇게 간과할 내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품격이 올라가지요.

○ (강은희 위원) 예. 그래서 좋은 언어를 쓰고 아이들이 언어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면 더 좋은 교육이 되고 아이들의 인성과 성장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 (위원장) 어휘력이 아주 간단한 경구이지만 언어가 사고의 집입니다. 어휘가 부족하면 사고를 심화시킬 수가 없어요. 어휘가 부족한 상태를 방치한다는 것은 국가교육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그에 대한 무슨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 (양오봉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예.

○ (양오봉 위원) 오늘 하여튼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고요. 일단 제 간단한 의견은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오늘 논의된 내용을 담아서 이 위원회에서 좋은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일단은 오늘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과학인재 특별위원회, 문해력 신장 특별위원회를 발족해서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담아서 좋은 안을 마련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 (위원장) 과학인재 발전에 대해서는 논의가 모아지지 않았습니

다.

- (양오봉 위원) 인재강국 위원회가 일단 끝난 다음에 과학인재이기 때문에, 저도 KAIST를 나왔는데 과학인재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지금 의대 쏠림 현상 때문에 김경희 상임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결국 우리나라의 경쟁력이라는 것이 사실 과학기술에서 모든 수출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저는 꼭 이것이 다뤄져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제 많은 얘기가 오고 갔기 때문에 지금부터 발언은 한 1분 이내로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도 위원)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에 대부분 공감을 하고요. 특히 문해력 문제는 대학에서도 심각해서 대학 같은 경우는 교수학습개발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지도를 하는 방법 이런 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안전은 하나인데 각기 성격이 다른 특별위원회가 2개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각각 의견을 물어서 하는 것이 맞지 이 2개,
- (위원장)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 (김영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반상진 위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문해력을 너무 3R에 초점을 맞추시지 마시고, 아까 유민봉 위원께서 위원을 다양한 사람으로 모시자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디지털 리터러시도 있고 미디어 리터러시도 있고 리터러시의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그 범위를 2~3개 확장시켜서 해야지 너무 3R 정도로 한다면 국교위에서 특위를 만들었는데 너무 협소한 노력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리터러시 범위를 넓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 (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결코 좁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의견을 모아서 명칭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 (김주성 위원)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문해력이 높다고 그러시는데 사실 그것은 우리가 한글을 쓰기 때문에 받아쓰기를 우리가 일찍 끝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3학년이면 끝내는데, 미국에 가면 중학교 3학년에 가야 받아쓰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해력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은 그 문제가 아니고 텍스트를 잘 이해 못한다는 것이지요. 언어혁명이 우리나라처럼 급격하게 일어난 나라가 없기 때문에 이 문해력 문제, 텍스트 이해하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에게 부담이 보통 큰 것이 아니라서 우리가 PISA 테스트를 해 봐도 글자 아는 것, 그러니까 리터러시는 우리가 높지만 사실과 의견을 다루는 테스트는 우리가 OECD에서 제일 낮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텍스트를 이해하는 문해력이 낮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려는 자체는 작은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제안자이신 김 건 위원님 발언 듣고 토론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 (김건 위원) 마무리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그래도 질문을 해 주신 것이 있어서 몇 개만 답변을 드리고 넘어가자면 지금 저희 특위 중에 고교교육 특위가 4월 말에 마무리가 되고, 5개 특위가 5월, 그리고 3개 특위가 6월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점상 11개 특위가 한꺼번에 운영되는 그런 일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사실 오히려 주제의 범위가 좁을수록 더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문해력이 완전히 좁은 범위는 아니겠지만요. 오히려 너무나도 넓은 범위의 특별위원회는 운영상의 어려움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 그리고 질문 주신 것 중에서 AI시대 교육 특별위원회, 그리고 AI 리터러시와의 관계성이 있었는데 사실 AI 리터러시라는 것은 그냥 문해력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AI에 어떤 프롬프트를 넣을지, 그리고 그 결과물을 어떻게 해석할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까지 통틀어서 AI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해력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할까요? 그 정도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겁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 교육부에서 이것 관련해서 지침을 내려준 것이 있었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참고한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의도한 것이 맞고요. 다만,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방향성의 경우는 사실 이것은 안이 맞습니다. 저희 제목에도 '(안)'으로 괄호 쳐서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 방향성은 달라질 수 있고 특별위원회 구성이 된다면 그 특별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부 지침과 가장 다른 것은 이것이 결국 저희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산출물이 어떻게 반영될지는 저희가 앞으로의 회의, 논의에서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나하나 정해야 되는데 대체로 찬성 발언이 높았던 두 번째 문해력 신장 특위 제안부터 먼저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저의 제안은 유민봉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문해력 특별위원회' 이런 이름으로 추가 구성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그 이름으로 찬반을 물어서 결정할까요?

(「예」하는 이 많음)

그러면 문해력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 의견을 묻겠습니다. 혹시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전원 찬성했지요? 만장일치로 문해력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 두 번째 과학인재 특별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찬반을 바로 묻기보다 제 생각에는 지금 인재강국 특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에서 이 문제가 해소되면 과학인재 특별위원회를 추가로 또 만들 필요가 없게 되고요. 그 논의가 부족하거나 하면 만들 필요가 생기는데요. 일단 오늘은 구성하는 데 좀 무르익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혹시 찬반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과학인재 특별위원회를 이 시점에서 구성하는 데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 (강은희 위원) 위원장님, 조금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 (연취현 위원) 구성하는 것은 인재강국 특위가 끝난 이후에 하고 그때까지로 판단을 보류한다,
- (위원장) 예, 그렇지요. 인재강국 특별위원회 보고서를 보고 과학인재 특별위원회 구성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찬성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양오봉 위원님, 오늘 구성하자는 데 대해서는 지지자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 (양오봉 위원) 저는 인재강국 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도 사실은 우리가 판단이 쉽지 않은 얘기인데 인재강국 위원회에서 6개월 만에 좋은 결론이 나오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서 그 연장을 하는 의미에서도 더 좁혀서 과학인재 특별위원회를

발족해도 저는 굉장히, 또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떤든 간에 AI를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그런 면에서 인재강국 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이것을, 사실 과학인재는 우리가 심도 있게 아주 중요한 논의를 더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말씀입니다.

- (위원장) 제 생각을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이것이 국가제도를 논하는 것이고요. 당위성만 논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당위성과 필요성을 아무리 많이 논의한들 현실에서 정책으로 정착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낭비입니다. 그래서 인재강국 특별위원회의 논의를 보고 거기서 최선의 안을 만들고, 그런 다음에 이 특위를 만들어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한지는 그때 가서 논의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바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안에 대해서는 지지자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웃 음)

- (강은희 위원) 어느 정도의 강도가 되어서 이루어지는지를 모르니까 그 부분이 위원들이 걱정하는,
- (위원장) 지금 중복적으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한 위원회에서 중복적인 주제로 논의할 수는 없고요. 한 위원회에서 이 주제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도중에 또 다른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그래서 그 논의를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 (양오봉 위원) 저만 찬성한 것인가요?
- (연취현 위원) 인재강국 특위의 최종 보고 이후에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논의한다,
- (위원장) 예.
- (김주성 위원) 우리 양 교수님이 너무 외로운 것 같아서요.

(웃 음)

- 한 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요즘 AI 업계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굉장히 무서운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올해 말이면 들어 올 것이라는 얘기가 다 이루어지고, 이제 고용과 가치가 분리되고 job이 몇 년 내로 없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전부 과학의 문제인데 중국에서는 지금 굉장히 많은, 미국이 오히려 그쪽에서 지금 개발해 놓은 속도를 굉장히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서둘러야 되지 않겠나, 우리 양 교수님이 정말 마음이 급해서 그러시는 것인데 과학도의 마음을 우리가 좀 헤아려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과학인재 양성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시급성도 공감하는데 현재 과학인재 양성과 관련된 모든 학교급별의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능을 100% 발휘하게 하고 잘 연결되도록 하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하는 것이 1순위이고요. 단순히 뭘 확대하자는 것은 단순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상당히 많이 검토가 필요해서 그 정책방향을 한번 보고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과학인재 특위는 다음에 인재강국 특위 논의 결과 이후에 그 필요성 여부는 새로 검토하기로 하고, 문해력 신장은 아까 결정된 바대로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결정사항을 낭독해 줘야 됩니까?

○ (간사) 예.

- (위원장) 국가교육위원회에 문해력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합니다.

(의 사 봉 3 타)

그다음 안전 보고해 주세요.

바. (보고안전) 특별위원회 활동 상황 보고

- (보고자A) 다음은 보고안전인 특별위원회 활동 상황 보고에 대해서 교육발전총괄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집 52쪽입니다.

- 지난번 특별위원회 운영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보고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특별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고드립니다.
- 먼저 고교교육 특별위원회입니다. 고교학점제 등 교육 현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현장 안정화와 운영 내실화를 위한 고교교육 대안을 마련하고, 류방란 위원장님 및 위원 16명이 논의 중입니다. 임기는 4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국교위 63차 회의에서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 개정 관련해서 자문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 두 번째로 인재강국 특별위원회입니다. 첨단과학기술, 산업·경제, 문화·예술, 공공·행정, 국제분야 등 인재양성, 인재유출 방지, 해외인재 유치 등 인재 경쟁력 강화 전략을 제안하고 있고, 반상진 위원장님 등 위원 17명이 5월까지 임기를 가지고 활동하고 계십니다. 현재까지 9차례 회의를 했고요. 인재양성, 인재유출 방지, 유치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계십니다.
- 고등교육 특별위원회입니다.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및 고등교육의 국가경쟁력 도모 방안을 제안하고, 장덕현 위원장님 등 위원 14명이 5월 17일까지 임기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동시간대에 7차 회의가 개최되었고요. 지역 동반과 대학 서열화 관련해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영유아교육 특별위원회입니다. 영유아 사교육 문제 등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위한 과제 발굴 및 대안 마련으로 김성열 위원장님 등 위원 13명이 5월 24일까지의 임기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미래 사회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돌봄 체계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계십니다.
- 다섯 번째로 학교공동체 회복 특별위원회이고요. 김 용 위원장님이 추후에 별첨자료 가지고 조금 더 첨언해 주실 예정입니다. 반상진 위원장님도 인재강국 자료 제출해 주셔서 조금 더 첨언해 주실 예정입니다. 5월 26일까지 활동하시고, 현재까지 7차례 회

의를 통해서 학교공동체 회복을 위한 학교폭력 진단 등 우선과제를 설정해서 정책제안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 AI시대 교육 특별위원회입니다. 사람을 위한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하여 논의가 필요한 관련 교육 의제를 발굴·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서 안승문 위원장 등 위원 12명이 5월 27일까지 임기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AI 활용 역량 제고, 학생 맞춤형 교육 등 교육 패러다임 전환, 그리고 디지털 시민성과 윤리의식 내면화 등을 논의하고 있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와 합동으로 2월 5일에 포럼도 개최하였습니다.
-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는 차정인 위원장님이 6월 2일까지 임기로 위원 13명과 거의 매주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 인문사회 특별위원회는 김명환 위원장님 등 위원 13명이 인문학적 소양과 문화·예술 감수성,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와 공감능력을 갖춘 인재양성 등 여러 정책제안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이번 금요일에도 집중작업을 통해서 보고서 목차 논의를 열심히 하시고 계십니다.
- 민주시민교육 특별위원회는 고대혁 위원장님 등 위원 15명이 6월 21일까지 논의를 진행하고 계시고 현재까지 다섯 차례 회의를 통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계십니다.
- 추가 참고자료로 별지를 드렸습니다. 고등교육 특별위원회, 인재강국 특별위원회, 학교공동체 회복 특별위원회에서 중간보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보미 위원) 발언 신청 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예. 이보미 위원님.
- (이보미 위원) 특위 활동 상황 보고 내용 잘 들었고요.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이 지난번에 교육부에서 1월 30일에 민주시민교육계획을 발표하셨는데 학생들의 헌법적 가치 내재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 애써주신 내용으로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서 우리 교육부만 움직일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살아있는 민주시민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원 정치기본권 회복에 관한 논의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집행기관인 교육부와 우리 국교위도 보조를 맞추고 균형을 맞춰서 이런 계획을 잘 실행하실 수 있도록 국교위 차원의 비전 제시가 잘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교위 안에 있는 민주시민교육 특위에서 어떤 비전을 앞으로 제시할 것인지 점검하고 소통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현재 학교 현장의 상황은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교사들이 역사교육, 사회교육을 진행하더라도 교과서의 내용을 그대로 가르치는데도 정치적이라고 민원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곤경에 빠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사 시민권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을 국교위 차원에서 비전 제시와 함께 논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주시민교육 특위에서 보고서 들어온 것은 이 정도로 보고가 들어왔고요. 지금 민주시민교육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교원 정치기본권을 직접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학교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완벽하게 지키면서 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공동체에서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시민으로 기를 것인가 이런 주제를 가르치고 있고요. 정치기본권 문제는 다분히 학교 밖에서 한 개인의 기본권 주체로서의 논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사로서 직업 활동에서의 문제는 학교 교육의 문제로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이어서 범주가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다른 주제가 되겠지요.
- (강은희 위원) 위원장님, 방금 이보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하려고 하는 민주시민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더불어서 한 가지 제가 교육부에 직접 확인을 해 봐도 되는 문제인데 국가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조금 건의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안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예고가 된 교육부와 행안부의 교원 정원 협의가 올해 3월에 진행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국가 전체의 상황에 맞춰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교육부 내에서 정원에 대해 행안부와 조정하는 부분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만약에 가능하다면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이 수립되고 교원 정원을 같이 함께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국가교육위원회 차원에서 한번 이 사안을 건의한다든가 조금 유보했다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이 나오면 교원 정원을 협의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공식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 (이광호 상임위원) 저희는 10년 계획을 하게 되면 확정은 내년 초에 발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교육부와 행안부, 기재부까지 포함한 논의를 올해 안으로 그 문제를 마무리 지으려고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안할 수는 있지만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것을 완전히 중단할 수 있는 어떤 구속력을 가지는 정무적 행위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물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 최대한 교육계 의견을 반영하겠지만 지금 논의되는 것을 여기서 중단시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강은희 위원) 그래서 매우 어려운 내용이어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 중이니 이것을 좀 감안해서 교원 정원 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건의를 해 주십시오, 물론 우리가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도 그런 건의를 지금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손덕제 위원님.
- (손덕제 위원) 조금 전에 이보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위원

회의 어떤 내용들에 대한 점검과 소통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신 것에 저도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으로 들어가 계시는 분이 우리 위원회에서 두 분이 계시고, 그리고 저는 고교 교육 특별위원회에 제가 들어가서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만나게 되고, 그다음 달에 만나 뵙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도 고등학교, 중학교에 근무했던 학교 현장의 전문가로서 거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과 또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 자리에 와서 우리 국교위원님들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이해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다들 바쁘셔서 가지시는 못 하겠지만 위원님들이 특별위원회의 모아진 의견이 정리되는 시간이나 이럴 때 토론하시는 것을 참관하는 것에 대한 지원이 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그리고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도 지금 특별위원회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무엇인지 사실 저희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현장에서는 공문이 내려오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벌써 내려오고 있습니다. 울산만 하더라도 교장 선생님들 연수가 지난주 화요일인가에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교육과정 교과 또는 창체의 범교과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10시간 운영을 반영하라고 해서 각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 시간을 무조건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 그리고 그다음 내려온 공문이 2026학년도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계획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계획안의 비전을 보면 민주시민교육 성장을 뒷받침하는 역사교육 생태계 확립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이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민주시민교육의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역사과와 사회과에 굉장히 많은 토론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역사의 과위가 더 커져서 이렇게 왔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들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또 우리 국

교위에서 그런 방향성을 설정할 때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교육의 중립성과 실제로 민주시민에게 필요한 자질과 역량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 정말 어떤 부분이 교육에 흘러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논의조차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소통이나 이런 과정들을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특위를 참관하는 것은 특위 위원장들이 회의마다 개방 등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위 위원장들이 결정할 사항이지만 요청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김용 위원) 제가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아마 특위 위원장들께 사무처에서 이런 내용을 좀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적절하게 아마 그것을 허용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이현 위원) 관련해서 의견을 제안드리면 각 특위별로 일정표가 우리에게 공유가 되면 좋겠다 싶어요. 몇 차 회의를 언제 하고 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특위별 일정표가 공유되면 저희 위원들 중에서 특별히 관심 가지시는 특위에 내가 여기는 언제 참여해야겠다, 이런 판단을 하실 수 있게 첫째로 특위별 일정표가 위원들에게 공유가 되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 두 번째는 특위 최종 보고서가 나오는 시점도 공유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까 인재강국위원회 보고서를 보고 과학인재 관련된 특위에 대해서 유예 판단을 한 번 더 해 보자고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린 셈인데 지금 보면 일정이 대개 5월, 6월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때 보고서가 10개, 11개가 쏟아져 나오면 그것을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좀 됩니다. 그런데 우선은 최종보고서가 특위별로 언제 나올지에 대해서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두 번째 제안이고요.
- 세 번째는 최종보고서 나오기 전에 중간보고서가 나오는 일정이

있어야 되겠다, 사실 연구보고서 쓸 때 최소한 중간보고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보고서가 또 특위별로 나오면 저희 위원들이 최종보고서가 한 번에 쏟아졌을 때 검토하는 것에 비해서 중간보고서 먼저 보시고 뒤에 최종보고서도 보시고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 (위원장) 지금 고등교육과 인재강국과 학교공동체는 지금 현재까지 논의된 것을 보냈습니다. 지금 그렇게 사무처에서 안내를 하고 있고, 그런데 아마 정리하면서 중간보고서를 다시 쓰는 수고를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세 위원회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중간보고 없이 최종보고서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위에는 그런 식으로 전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 특위를 발족하면서 6개월을 시한으로 했고 특위가 작년 10월부터 11월 사이에 했기 때문에 금년 4월 또는 6월 사이에 종료를 하게 됩니다. 종료하지 않고 더 연기가 필요하면 연장을 허용할 생각인데 대체로 마무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 (박영환 위원) 질의 있습니다. 붙임1번으로 해서 지금 나온 문서가 따로 있는데 이것은 그냥 문서로 대체하는 보고로 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발제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 것인지...
- (위원장) 발제로 중간보고할 계획은 없는 것이지요?
- (사무처장) 그것은 특위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부 특위에서 제출한 자료이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면 지금 해당되는 특위 위원장님 두 분이 여기 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궁금하신 것은 직접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영환 위원) 그래서 계셔서 여쭙봤습니다. 학교공동체 특별위원회 보고문서 7쪽과 그 앞에 보면 다루는 것이 두 가지인데요. 학교폭력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처벌법, 이 내용인데요. 이것이 사실은 학교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대단

히 심도 있게 다뤄야 되는 주제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계획에 나와 있지만 한 번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학교가 사법화되어 있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안들이 교육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계속 외부기관에 의해 법적으로 해결되거나 심지어 학교폭력이 너무 심해서 가해학생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변호사들의 거의 놀이터가 되어 있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학교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논의를 가져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큰 공감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기부 기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시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학교공동체 특위뿐만 아니라 저는 국가교육위원회 전체적으로 꼭 다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정인 위원장님께서 잘 챙겨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요.

- 또 하나는 학교폭력 문제는 학교 안에서 다루겠다고 해서 이렇게 논의를 가져가는데 아동학대 사안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그 결을 좀 다르게 가져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마디로 지금 저희 전교조에서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동학대에서 정서적 학대, 그리고 방임에 대해서는 교사들에게 적용하지 않고 교육적으로 풀 수 있는 별도의 교육청의 처리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초·중등교육법에서 하지 말아야 될 교사들의 행위를 규정하고 정서적 학대와 방임은 제외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지금 방법에서는 학교 안에서 해결한다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교사들이 가해학생을 지도하면서 겪게 되는 문제가 심리적 위축이고 신고 때문에 어떤 조치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해결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동학대에 있어서 바로 경찰에게 조사권을 준든지 그리고 검찰로 넘어가는 이런 단계의 것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학교에서 적용되는 모든 교육정책들이 어그

러지고 수용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학교공동체 특위에서 무게 있게 다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무리 반대한다고 해서, 그리고 인권단체라든지 여러 단체들에서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것을 정면으로 부딪치고 논의해 가지 않으면 이것은 결국 검찰, 경찰 단계로 넘어가는 내용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방향의 선회가 필요하고 논의를 꼭 해 주십시오 요청드리겠습니다.

- (김용 위원) 특위에서 박영환 위원이 말씀하신 문제를 저희도 토론을 했습니다. 아동복지법상의 교사 면책 관련한 부분인데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국회에서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찾은 것이 면책은 하지 않되 아동학대처벌법상의 처리방법에 대해서 조금 특례를 규정하자, 저 개인적으로는 박영환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 상황 등을 보았을 때 지금 시점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한번 쉬어가는 정도의 생각으로 이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특위가 결정할 문제는 아닌데 아마 위원장님, 상임위원님이 결정을 해 주시면 국회에서 이런 다양한 의견을 다루는 기회를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학교공동체 회복 특위에서 다루는 주제들 중에 중요 주제로 아주 큰 쟁점이 되는 것이 3개가 있고, 총 합하면 6개 정도는 중요한 주제인데 제가 관심이 많아서 본격적으로 하는 한 4시간짜리 토론 과정을 다 참석해 봤는데요. 그래서 정리된 것이 기본적인 방향은 가슴 아픈 학교 현실인데 사법부로 가지 않고 학교 내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에 그 방향을 지향하면서 방안을 짜보고 검토를 정말 다각도로 했어요. 그렇게 다각도로 하고 제가 읽어볼 때는 이 정도면 누구라도 수긍하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만큼 견해 대립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

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어려운 주제이고 나중에 결국은 본위원회에 이 내용이 보고될 것입니다. 그때 제대로 한번 이 사안을 둘러싼, 각종 쟁점을 둘러싼, 다들 교육을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들이지만 상당히 상반됩니다. 그래서 그 주제는 오늘 본격적으로 다루기는 너무 이야기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고, 방금 박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김용 위원장님께서 참고하셔서 논의를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보미 위원) 저도 다시 한번 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아까 민주시민교육 특별위원회 관련해서 교사 정치기본권과 약간 선을 긋는 발언이 있으셨는데 저는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제대로 된 질적으로 높은 민주시민교육을 하기 위해서라도 교사의 정치기본권 회복은 꼭 이 특위 안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사가 당연히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면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에는 저도 무척이나 동의하는 바인데요. 정치적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한 교사가 학생들에게 보이텔스바흐 합의와 같은 그런 논쟁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도 어렵고요. 우리나라의 교육정책 참여나 이런 것들이 매우 제한된 상황 안에서 이런 논의들을, 학교 밖에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교사에게 책 속에서의 민주주의만 가르치는 그런 학교현장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대통령님의 공약에서도 그렇지만 정치권에서도 이런 논의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교위라는 곳은 단순히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발표되는 이런 것들을 지켜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앞선 비전을 제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고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제가 그 말씀의 취지를 오해 없이 잘 들었는데 현재 이 주제에 대해 일단 관련성이 있는 위원회는 민주시민교육 특별위원회이니 이 위원회가 방금 이보미 위원님이 관심 있는 그

주제, 그 논의를 전적으로 배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그런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인데 그것까지 논의를 확대할지는 이 특위에 맡겨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저로서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제가 주문할 수도 없고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오는 것을 봐서 또 한 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연취현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예.
- (연취현 위원) 박영환 위원님께 좀 진술 정정을 요청드립니다. 학교공동체가 가해자를 편들어서 변론하는 변호사들의 놀이터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학부모이자 법률인으로서 좀 표현이 과하셨던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의 가장 어려운 점은 뭐냐 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일률적으로 자로 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하고 싶은 말이 많고,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 모델이 있지만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갈등중재라는 모델을 제시해 본 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를 편든다, 변호사들이 많이 개입할 수밖에 없고 사법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우려를 가지고 있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이신 것으로 보이고요.
- 또 한 가지는 형사 사법화하는 것을 막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대한민국 국민의 사법적 권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형사사건 고소는 누구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강화해서 선생님이 마치 아동복지법 위반행위가 있었던 것을 가정해서 언론화하거나 너무 낙인을 미리 찍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셔야지 형사사법 절차를 배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미리 사전에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 (박영환 위원) 일단 아까 '변호사들의 놀이터'라는 표현은 좀 과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여기서 토론할 것은 아닌데 약간 제가 전달 드린 의미가 좀 다르게 전달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따로 얘기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현 위원) 위원장님, 질문이 있습니다.
- (위원장) 저도 변호사로서 발언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웃 음)
- (이현 위원) 질문 있습니다.
- (위원장) 예.
- (이현 위원) 특별위원회에서 보고서가 나오면 그 보고서는 일종의 국가교육위원회의 자문자료인 것이지요?
- (위원장) 그렇지요.
- (이현 위원) 그 보고서에 대해서 그러면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다음에 그 보고서의 자문 내용을 채택하거나 수정을 제시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 (위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특위 보고서는 그 특위 보고서대로 완성된 것이고요. 그런 조건 하에서 누가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겠습니까, 특위 위원들은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한국 교육을 걱정하면서 논의를 하고 결정을 내는 것이지요. 그 보고서를 국교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자기 할 일을 다 한 것이고요. 그 보고서를 당장 정책화한다든지 정책을 제안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지는 이제 국교위가 판단해서 할 일이지요.
- (이현 위원) 그러니까 국교위가 특위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 이런 보고서의 내용에 기초해서 정책을 이렇게 가져가자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보고서는 보고서로 제출이 되었지만 그 보고서 내용을 국교위의 정책 지향적 방향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뜻인 것인가요?
- (위원장) 그럴 수도 있겠지요.

- (이현 위원)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중간보고서를 학교공동체 회복 특별위원회의 중간보고서 같은 이런 정도는 제출해 주기를 바랐었던 겁니다. 이 정도가 되어야 이런 논의가 되고 있구나 하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앞에 인재강국 중간보고는 목차라도 있는데 고등교육 특위의 중간보고의 내용은 이렇게 써놓으면 이것은 사실 어디서도 흔히 읽어보는 문구 정도 이상은 아니어서 실제 특위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학교공동체 회복 특위에서 김 용 위원장님이 써주신 것처럼 이런 정도라도 사전에 주면 위원들이 논의가 되는 내용들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요청을 드렸던 것인데요.
- 질문은 학교공동체 회복 특별위원회 중간보고에 보면 향후계획에 국회 토론회 개최가 있습니다. 특위에서 독자적으로 원래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인가요? 어떤 것인가요?
- (위원장) 토론회라는 것은 그 속성상 자유롭게 개최하고 토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를 하거나 하는 것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교위의 활동 방향과 아주 배치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는 있겠지요.
- (이현 위원) 그러니까 그랬을 때 국가교육위원회의 특별위원회 이름으로 토론회를 진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 토론회를 개최할 때는 그 토론회도 전략이지 않습니까, 여러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고, 주최, 주관, 후원 등등 여러 이름을 쓰면서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 토론회를 설계하기 나름이지요. 전략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현 위원) 알겠습니다.
- (김건 위원) 저희 특별위원회가 1년 임기로 운영이 되었을 때는 보통 한 절반 정도가 지나면 중간보고를 본위원회에서 하시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보고서가 나온 이후에는 이제

최종보고를 특별위원회에서 하러 오셨었습니다. 다만, 지금 특별위원회 같은 경우는 임기가 6개월로 비교적 짧은 편이고 저희 본위원회도 월 1회 회의를 하는 실정이다 보니 아무래도 특위에서 직접 나오셔서 중간보고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 다만, 이렇게 서면으로 중간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래도 학교공동체 회복 특별위원회 중간보고를 자세하게 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무래도 마무리 보고는 그래도 특별위원회에서 직접 오셔서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이,
 - (위원장)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지요? 그렇게 할 겁니다.
 - (김건 위원) 그러면 다음 회의 때 혹시 그것을 기대해 봐도 되는지 아니면,
 - (위원장) 다음 회의 때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 회의 때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겁니다.
 - (김건 위원)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 (위원장) 특위의 사정들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 (김건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 주제는 여기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⑥ 차기 회의 일정 등에 관한 사항

- 제67차 회의는 2026년 4월 9일 개최

⑦ 마무리 말씀 및 폐회

- (위원장) 이제 제가 인사말하고 마치라고 카메라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인사말을 하겠습니다.
- 위원님들,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성

과를 낸 또 하나의 위원회였습니다. 오늘은 우리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써 문해력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큰 성과이고, 앞으로 실효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잘 준비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일 동 박 수)

이것으로써 제66차 국가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 사 봉 3 타)

(일 동 박 수)